주간 이슈 리포트

54 호

2004년 8월 네째주(8/23 ~ 28)

◎ 주요내용

- *세상돋보기:* *보건복지부의 자활훈련기관에 대한 상대성 이론*
- *노동자 세상:* *그 많던 참이슬을 누가 다 먹었을까?*
- *통신정책:* *휴대인터넷 기술 중첩 논란*
- *정자동 6층에서* *민영화 2주년의 의미*
- *만화방* *시사 만화*

KT노동조합

세상돋보기

보건복지부의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상대성 이론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의 “자활후견기관의 목적사업비보다 기관운영비를 초과하는 기관과 지난 3년간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지 않은 기관 15개를 지정 취소 및 통폐합한다” 발표는 기본적으로 자활사업 현실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활후견기관의 종사자와 참여 주민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의 결과이다
"기관운영비가 목적사업비를 초과한다"는 것과 "3년간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한 기관이 있다"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살펴보면 목적사업비는 자활근로사업비를 말하는 것으로 자활근로예산은 자활후견기관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자활후견기관에 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당연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물어야 한다
'자활공동체 설립이 미비하다'는 지적은 경기 침체로 대기업들도 힘없이 쓰러지는 상황에서 3년 내에 수익을 발생하여 자활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게다가 자활후견기관의 활동 목표가 자활공동체의 설립 · 운영지원뿐만 아니라 자활 의욕 고취, 정보 제공,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간병 사업 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자활공동체 설립 미비의 이유만으로 관련 기관을 지정 취소 및 통폐합시킨다는 것은 본래의 취지를 간과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몇몇 자활이 통폐합되고 허가가 취소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가치관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가 '생산적 복지'를 시종일관 주장해온 정부가 효율성에 집착한 나머지 사명감을 갖고 최저생계비를 간신히 넘는 급여를 받고 있는 현실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자활기관 실무자들의 의욕마저 꺾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국민일보에서 자활기관의 현실과 대안에 대한 기사를 옮겨적는다

최근 감사원은 자활 후견기관 26곳에 대해 기관운영비를 사업비보다 더 많이 쓰거나 자활공동체를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와 통폐합,경고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조치를 받은 26개 기관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기관운영비는 정부가 일괄 책정해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지자체가 예산을 별도로 할애해주는 상황에서 후견기관이 임의로 자금을 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산하 종로자활후견기관 관장인 정호성 목사는 적은 월급은 둘째치고 속이

상해 죽을 지경이다. 5명의 직원과 함께 어렵사리 기관을 꾸려왔건만 격려는 커녕 뭇매만 맞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후견기관은 이름만 기관일 뿐 전화도 없었다.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나와야 하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예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500만원과 빚으로 버텼다. 지자체에서 5000만원이 나온 때는 2개월 뒤인 10월이다. 5000만원은 5개월간 살림비다. 인건비와 운영비,판공비,직원 및 자활 근로자 교육비,홍보비,자활공동체 사업비까지 이것으로 해결했다.
자활후견기관은 근로능력과 의지가 없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기관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일은 기독교 기관 등 민간이 한다. 그래서 후견기관이 하는 사업은 민·관 협력사업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후견기관이나 정부도 민·관협력사업이라고 인정하지는 않는다.

후견기관은 기관운영비는 복지부에서 고정적으로 나오지만 사업비는 지자체가 할당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적게 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반발했다. 또 조치대상 기관의 상당수가 신규기관인데다 사업비에 포함돼야 할 항목이 운영비에 포함됐다며 감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중간에 낀 복지부는 뒤늦게나마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실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자활후견기관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민·관·교회의 협력을 기초로 참여자들의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사업예산 확대,규제 완화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에 따르면 현재 자활 근로자들이 받는 일당은 2만5000원으로 30일간 근무하면 75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에서 극빈층에 지급하는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 36만8000원,2인 가구 60만9842원인 점을 감안하면 자활 참여자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자활기관 실무자들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 자활기관 실무자들의 처우는 일반 공무원은 물론이고 사회복지관 종사자들보다 뒤떨어진다. 9급 공무원(1호봉 기준)의 월급이 145만원인데 비해 복지관 4급(1호봉) 직원은 119만원,자활 후견기관 4급(1호봉)은 이보다 적은 109만원을 받는다. 학비 보조와 근속 수당 등의 혜택도 자활기관 종사자들에겐 돌아가지 않는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백영희 교육홍보부장은 “복지관은 상황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면서 “자활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급여는 물론이고 4대 보험에도 제대로 가입할 수 없을 정도로 처우가 나쁜데다 사업장의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어 어려움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4년째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운영비를 묶어둔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정부는 기관 규모에 따라 연간 8000만 1억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다.
사업예산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예산은

기관의 요청과 별개로 지자체가 임의로 조정한다고 후견기관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평가 잣대도 바뀌어야 한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 기관 운영 효율성이나 사업 효과로 자활근로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규제일 뿐 사업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종로자활후견기관 정호성 목사는 “자활 근로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이 대다수인데 정상인 기준으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정부에서 정해준 예산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데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제도를 하루아침에 뜯어고칠 수도 없고 예산을 한꺼번에 쏟아부을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사회복지연구원 원장 김현호 목사는 “빈곤층 자활은 심리?경제?사회?직업적 자활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라면서 “시한부적 구제가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많던 참이슬을 누가 다 먹었을까?

- 진로 파업뒤에 감춰진 진실 -

불경기가 되면 다들 매출이 떨어진다고 울상을 짓지만 나 홀로 호황을 구가하는 품목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동자 서민의 벗 소주이다. 소주의 대명사 격으로 불리는 진로, 그 진로가 술렁이고 있고 곧 소주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진로는 20일을 기해 부분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주)진로는 지난 97년 부도를 냈고 현재 법정관리 상태에 있다. 그러나 진로의 경영상황을 들여다보면 어리둥절하기 짝이 없다. 30년 이상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98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시장 점유율 1위, 03년 전국시장 점유율 54.6%, 수도권 점유율 92%, 04년 7월 참이슬 누적판매 70억 병 돌파, 매출액 6433억, 매출 이익 1675억. 화려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는 이 외에도 무수하다. 이 정도쯤이면 초우량 기업 아니면 시장 지배적 독점기업이라는 칭호를 내려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하다. 그러나 03년 영업외 비용 1조 1093억, 당기순손실 9190억 그리고 부채는 1조9112억 원에 달한다. 이 상반된 지표 뒤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지난 88년 진로 창업주의 차남 장진호는 경영권을 둘러싼 치열한 분쟁 끝에 진로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진로그룹은 바로 다음 해 서초동 남부터미널 인근에 아크리스 백화점을 개점하고 전자, 건설, 금융, 레저, 케이블 방송 등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했다. 95년에는 막대한 초기투자를 무릅쓰고 미국 쿠어스와 합작으로 두산-하이트 양강체제가 수십년간 굳건했던 맥주시장에 뛰어들기도 했다. 이 와중에 재무구조는 악화일로를 걸었고 계열사 수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여 그룹의 속병은 깊어져만 갔다. 결국 진로는 수조 원의 차입금을 짊어진 채 IMF로 치명타를 얻어맞고 말았다.

물론 한국의 다른 재벌들과 마찬가지로 진로의 급격한 사업 확장 뒤에는 엄청난 규모의 정경유착이 자리잡고 있었다. 96년 8월 당시 진로회장 장진호는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정치자금 100억을 지급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그는 김현철 사단의 일원으로 재벌 2세 사조직에서 이웅렬 코오롱 회장 등과 함께 활동했다고 알려지기도 한다. 그 후 97년 대선 당

시에는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에게 반대했던 박찬종 전 의원의 탈당을 막기 위해 박 전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른바 북풍 사건의 재판기록에도 그의 이름은 발견되고 있다.

결국 장진호 전 진로회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진로건설등 4개 계열사에 (주)진로의 자금 6300억을 부당 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5500억을 사기 대출 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98년 3월 화의인가 이후에도 진로의 자금 680억을 부실기업에 부당 지원하고 부동산 매각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15억원을 조성 유용한 혐의가 드러나 04년 2월 징역 5년6월을 선고받고 마침내 교도소로 직행했다.

무능력하고 비도덕적인 재벌2세가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쳐 97년 4월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거 정상화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어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는 노동자들의 신상품개발, 임금동결, 상여금 반납, 생산성 향상 등의 공헌에 힘입어 매년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며 정상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실기업의 굴레를 썼지만 내실은 탄탄했던 진로는 초국적자본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97년 11월 진로는 부실기업의 굴레를 탈피하기 위해 골드만삭스의 경영컨설팅을 받을 준비를 했다. 경영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업비밀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비밀들을 달리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양측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협상과정에서 진로와 골드만삭스의 자문계약은 맺어지지 않았으나 비밀유지 계약은 2년 간 유효했다. 그 2년 간의 비밀유지 계약기간 중에 골드만삭스는 진로의 부실채권 수천억 원 어치를 형편없이 싼값에 구매할 수 있었다. 당시 진로의 채권자였던 국내 시중 은행들은 IMF 협약 사항에 따라 BIS 비율을 맞추는데 급급해 부실로 분류된 채권들을 형편없는 조건으로 털어 내고 있었다. 결국 골드만삭스는 IMF의 강제에 의한 국내 금융권의 요동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문계약 체결 협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알짜 채권을 싼값에 손에 쥘 수 있었던 것이다.

진로의 경영진은 뒤늦게 골드만삭스의 속내를 눈치채고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당시 그들의 능력으로는 골드만삭스를 당해낼 재주가 없었고 결국 법원은 골드만삭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골드만삭스는 초국적자본의 속성을 나타내 진로재팬 상표권 가압류, 진로홍콩 파산 신청등을 통해 진로의 자산매각과 외자유치를 가로막은 끝에 마침내 진로의 법정관리 신청을 주도했다. 골드만삭스는 정리계획안 통과 이후 원금의 대부분을 변제 받아 투자 대비 5~6배 이상의 이익을 거두었고 그와 별도로 구입가격이 아닌 채권액면가의 10%에 달하는 이자를 매년 꼬박꼬박 챙겨왔다.

현재 진로의 대표 채권자는 'Sena Investment(Ireland) Limited'이며 이 회사는 골드만삭스의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졌다. 그리고 진로의 매각예상 가격은 약 2조 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골드만삭스가 지금까지 진로에서 얼마의 수익을 거두었는지는 앞으로 얼마의 수익을 거둘지는 어림짐작조차 불가능한 상황이고 진로의 노동자들이 매출과 이익을 높일수록 골드만삭스의 주머니만 두둑해지고 있다.

한편 1,912 명의 직원중 1,466 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진로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사측과 열세 번의 협상을 벌였으나 타결하지 못해 지난달 26일 쟁의발생 신고를 했고 뒤이어 지난 5일 노사 양측은 중노위로부터 조정안을 받았다. 그 조정안은 임금 7% 인상(부대비용 포함, 통상임금 수준으로는 5% 정도)과 본봉기준 150%의 성과급 지급, 영업이익이 2000억 원을 넘길 때는 인센티브로 50% 추가, 주5일제는 노사 합의된 조건으로 시행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조측은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으나 사측이 이 중재안을 거부했다.

결국 지난 13일 전체 조합원 96.9%의 찬성으로 노조는 파업을 결의하였고 20일 현재 노조측은 준법투쟁에 뒤이어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부분파업의 결과로 진로 이천공장의 하루 생산량은 약 40% 정도의 감소가 예상된다. 그리고 각 언론에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의 도외시 한 채 '사상 초유의 소주 파동' 이라며 '경기도 안 좋은데 소주도 마음대로 못 마시게 될 지경' 이라며 진로노조의 투쟁을 왜곡된 시각으로 전파하고 있다.

봉필원 진로노조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금 여러 언론들이 떠드는 성과급 문제는 투쟁의 중요사항이 아니고 핵심적 요구사항은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의 도입이다. 또한 우리는 법정관리인이 시행중인 정리계획안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투쟁은 정리계획안을 뒤집어 엎고자 하는 투쟁은 아니다. 그러나 사측(법정관리인)은 주5일제 문제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라고 하며 근기법 이상의 조건에 대해선 대화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뿐더러 그들은 우리의 요구사항은 들은 체도 않고 M&A 이후에나 이 문제를 제기하라고 강변하고 있다. 사실 법정관리인 조차 실권이 없고 그 사람을 파견한 서울 중앙지법 파산 3부가 실권을 가지고 있는데 법정의 속내를 알 수 가 없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현 상황을 전했다.

진로 노동자들은 매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영업실적을 올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2000억 원이 넘을 전망을 보이고 있음에도 임금 7% 인상, 성과급 150~200% 지급이라는 중노위의 조정안 조차 거부당하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뛰어난 실적을 거두어도 노조가 임금인상 자체를 요구할 수 없는 이 상황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일까? 무능력하고 비도덕적인 재벌2세, 외환위기 이후 IMF와 한국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은 초국적 투기자본 그리고 초국적자본의 불법적 행위는 제어하지 못하지만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원 이들 셋중 과연 우열을 가릴 수 있을런 지가 의문이다.

휴대인터넷 기술 중첩 논란

정부가 휴대인터넷(와이브로) 허가정책 최종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중인 가운데 WCDMA의 차기 기술인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ess)와 와이브로간 기술 및 시장 중첩 문제가 또다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기술과 시장이 중첩될 경우, 투자촉진이나 시장활성화에 걸림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존 WCDMA 사업권자의 진입을 막거나 추가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한다는 게 KT를 비롯한 유선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유무선업계간에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이견들이 첨예한 가운데 HSDPA와 와이브로간 기술 및 시장 중첩 문제를 전자신문을 통해 짚어본다.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유선사업자들은 15일 "와이브로가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2006년에는 이동통신시장에 HSDPA가 도입돼 데이터 제공 측면에서 경쟁이 이뤄지는 만큼 WCDMA 사업권을 가진 SK텔레콤이 와이브로 사업권을 확보한다해도 기술 중복에 따른 시장활성화나 추가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SK텔레콤이 WCDMA 분야에 추가 투자를 하지 않는데도 2006년 6월까지 전국망만 깔면 된다며 마냥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당시의 허가 조건을 바탕으로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서비스 중첩을 막을 명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SK텔레콤측은 "WCDMA의 투자는 기술발전에 맞게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WCDMA는 음성·화상 전화와 중저속 이동시 데이터서비스가 되고, 와이브로는 고속 이동시 데이터 서비스인 만큼 상호 보완하는 비즈니스 모델 수립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의 한관계자는"IMT2000과 와이브로는 휴대폰에서 일부 중복이 일어날 수 있지만 노트북이나 PDA 등의 수요에서 전면적인 중복은 없다"라면서 "누가 망을 구축하더라도 유선 사업자와 무선 사업자의 협력 없이 효율적 망 구성이 불가능한 만큼 제약 없이 사업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유선사업자들은 SK텔레콤이 중복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사업허가시 불이익을 받게 하고 사업자수를 2개로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둬야 한다는 내용

의 대정부 건의안을 낼 예정이다.
정부는 휴대인터넷(WiBro) 사업자 허가 정책 초안에 대한 준비사업자들의 의견을 18일 수렴한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KT, SK텔레콤, LG 3사(데이콤, LG텔레콤, 파워콤), 하나로텔레콤 등 준비사업자들을 차례로 불러 공청회에서 미진했던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2 3개 사업자안에 대한 장단점과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제도 도입과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자회사 설립 참여, 주파수 사용댓가 등 세부적인 안들에 대해 각 사별로 입장을 듣는 한편, 준비사업자들은 각 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정책 의견을 통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오프라인 공청회와 전자공청회에 이어 공식적으로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준비사업자들을 한데 모으기 보다는 각 사별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순차적으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달 12일 열린 휴대인터넷(와이브로)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사업자 허가 정책 초안을 두고 사업자 2개와 3개안을 각각 지지하는 참여사업자들 간에 팽팽한 격론이 벌어졌다. 사업자 이외에 패널로 참석한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사들도 각각 다른 입장을 표명해 향후 정부가 최종안을 확정하는 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됐다.
◇2개냐 3개냐=KT와 하나로텔레콤은 이날 공청회에서 유선사업자 중심의 2개 사업자 선정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와이브로는 하나로가 사용하던 WLL망을 재활용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초고속인터넷(xDSL)의 끝단(last mile) 솔루션 중 하나여서 유선사업자가 비즈니스모델(BM) 구축에 유리하다"면서 "유무선 융합을 대비해 주파수를 독점한 무선업체가 아니라 유선업체 2개 업체에 사업권을 줘야 효율적인 시장형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IMT2000의 차기 기술인 HSDPA와 와이브로가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유사 서비스와의 경합관계, 주파수 이용 효율성, 투자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유선 2개 사업자가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 관계자는"가용 주파수의 경제성과 서비스 활성화, 소비자 편익을 고려할 때 3개 사업자 선정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LG 관계자도 "독점과 담합의 폐해를 해소하고 경쟁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무선이 결합된 3개 사업자 선정이 적절하다"고 주장해 업계간에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이견들이 첨예하다.

KT민영화 2주년의 의미

KT민영화 2주년 기념식이 20일 11:00시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용경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민영KT 2년간을 돌아보며, 향후 경영방침과 미래 KT그룹 10년의 비전과 100년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단순히 민영화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라, 제2의 창업을 선언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KT민영 2년을 평가하면서 경영효율화와 기업혁신을 통해 튼튼한 민영화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변화와 개혁의 과정이였고, 특히, 기존 제도와 절차 속에 숨어 있는 불합리와 모순을 개선하는 하드웨어적 변화와 개혁에 전념해 왔다며, 선진적이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기업혁신과 경영품질 향상을 위한 식스시그마, 기능의 전문화를 위한 조직체계 등은 그 성과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KT는 성장이 정체되고, 뚜렷한 신성장 엔진이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창사 이래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겪는 분명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우리의 강점인 KT그룹 전체 시너지 제고를 우선하는 의사결정과 수직적 지시와 이행관계보다는 수평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계열사 모두가 자기 몫을 다하여 상호 Win-Win한다는 확실한 인식을 통하여 위기를 잘 극복해 재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성장 사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위기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체질과 문화의 개선은 더욱 중요하다며, 체질개선의 요체는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도전정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생각하는 마인드, 꾸준한 자기 계발을 통한 역량 강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신뢰와 공감대 형성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KT 그룹의 재도약과 비전 실현의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KT그룹은 u-Sensing, u-Networking, u-Computing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정보를 주고 받는 Ubiquitous세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Ubiquitous세상을 주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차세대이동통신과 홈네트워킹을 비롯, 미디어, IT서비스, 디지털컨텐츠의 5대 신 성장사업을 발표하고 이사업에 주력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아가 KT그룹은 2010년까지 27조의 매출을 올리는, 강한

성장 기반을 가진 정보통신 전문기업으로 재도약할 것이며 세계의 통신사업자 중, 현재 22위에서 10위권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끝으로 경영진과 회사에 대한 신뢰와 화합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동참해 준 노동조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노사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동반자로서 KT 그룹의 변화와 재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가자며 기념사를 마감했다.

노동조합은 민영KT 2주년 기념사를 통하여 이용경사장이 밝힌 향후 경영방침과 미래 KT그룹 10년의 비전과 100년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미래전략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고 환영하며, KT의 미래전략이 계획대로 실행되기 위하여 노동조합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편 노동조합은 8대집행부 초기부터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조합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수 있는 직장건설을 위하여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선교섭 후투쟁이라는 교섭방식의 변화를 통해 노사신뢰를 회복하는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회사도 조금씩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면서 2004년초 시무식에서 사장의 고용보장선언으로 고용환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으며, 노동조합이 노사대토론회를 제안해 대화를 통해 현장의 문제와 경영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고 노사간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또한 2003년에 이어 2004년 단체교섭도 무쟁의로 노사간 합의하여 2년연속 무분규 단체교섭을 이끌어 냈다.

이제 노동조합은 과거와 같이 무조건 때쓰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관행들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다. 노사간 신뢰와 충분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정확하고 날카로운 논리와 정책으로 회사를 압박하고 압도하는, 그렇게 해서도 안될때는 노동조합의 마지막 수단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민주노조 건설이후 10여년이 지났으며 이제 노동조합도 성숙한 청년이 되었다.

아무쪼록 조합원들의 바램을 이끌어내는 조합원들을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영 2주년을 맞이하면서 KT는 도약할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 이제 KT는 도약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 바탕에 종사원의 안정과 노사간 신뢰가 있다. KT의 저력은 전종사원이 일치단결될 때 큰 힘을 발휘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민영KT 2주년을 맞은 지금부터 3만8천 조직의 KT저력을 보여줄 때이다.

만 화 방

만성피로
이젠 없어지면 허전할 것 같지
국가 보안법

과거사 캐기
특정정치세력 겨냥한 과거사캐기 중단하라
오로지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나아가신 지도자의 영도력이 그립습니다
그땐 '과거사만들기'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지
당신 과거에 北지령받고 누구누구와 접선했으며 공작금은 .....
그런일없다니깐요

앙유발 공영홍표백제 들어간 '찐쌀' 먹어도...
국민
'기사'만 빼면 안전합니다...?
사회부
총 봐주소 ...예?
신문
식약청

짐싸다가 전화만통...
신기남입니다
기분 어떠세요?
남일같지 않을텐데...
기남
신·기·남3종시?